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 2020 상반기 |

오늘의 세계경제

세계경제 포커스

KIEP 기초자료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페이지
2020.01.06.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김진오 외	01
2020.01.10.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정재욱 외	02
2020.01.1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김종덕 외	03
2020.01.15.	중국궈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이승신 외	04
2020.01.22.	호주 산불 피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신민이 외	05
2020.01.23.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허재철 외	06
2020.01.23.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07
2020.01.31.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조동희 외	08
2020.02.03.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윤여준 외	09
2020.02.10.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이규엽 외	10
2020.02.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최원석 외	11
2020.02.18.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정영식 외	12
2020.02.19.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외	13
2020.02.20.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 북러를 중심으로	최장호 외	14
2020.02.21.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태현	15
2020.02.26.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개혁 내용 및 지역통합 전망	조동희 외	16
2020.02.26.	일본의 재난관리대책 및 시사점: BCP를 중심으로	이보람 외	17
2020.03.05.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문진영 외	18
2020.03.11.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정민현 외	19
2020.03.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외	20
2020.03.16.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정지현 외	21
2020.03.23.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최장호 외	22
2020.03.26.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분석 및 전망	최원석 외	23
2020.03.30.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 주요 특징과 전망	허재철 외	24
2020.03.31.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영선 외	25
2020.04.2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강구상 외	26
2020.04.23.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	정영식 외	27
2020.04.28.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나수엽 외	28
2020.05.11.	미·일 무역협정(USJTA) 발효와 한·일 대미수출 경쟁력 비교	김혁황 외	29
2020.05.12.	2020년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	안성배 외	30
2020.05.13.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ODA 현황과 시사점	이주영 외	31
2020.05.19.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정지현	32
2020.05.21.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오태현 외	33
2020.05.22.	아르헨티나 외채 재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김진오	34
2020.05.25.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김유리 외	35
2020.06.04.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현상백 외	36
2020.06.05.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연원호	37
2020.06.10.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허재철 외	38
2020.06.11.	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정지현 외	39
2020.06.17.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천기 외	40
2020.06.18.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장윤희	41
2020.06.19.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오윤미	42
2020.06.24.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연원호 외	43
2020.06.25.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정민현 외	44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박미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 ◎ 2019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에 기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중미 지역에서는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함.
- ◎ 최근 중남미 시위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국가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만연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칠레와 볼리비아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에서 양 극단에 있는 국가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초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 [칠레] 경제성장의 성과가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지만 정부는 민영화와 복지 축소로 일관하였고, 연합정당 시스템과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간 누적된 불만이 시위로 이어짐.
 - [볼리비아] 좌파 정부의 국유화·자원민족주의·원주민 중심정책 등에 기득권층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출마와 부정선거 의혹이 반정부 시위를 유발함.
- ◎ 중남미 시위의 발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이 국가의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함.
 - 중남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내부 동력을 갖추지 못해 최근 성장둔화를 겪었고, 이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
 -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 비록 시위가 격화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19년 발생한 위기가 진행 중이면서 2020년에도 시위가 확산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아이티, 볼리비아임.
 -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도 인기 영합주의에 기대고 있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중남미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칠레에 비교되기를 원하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도 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 빈곤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새 정부가 출범한 파나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새 정부 대부분이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해 연합 정부체제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음.
- ◎ 중남미에서 2019년이 '반정부 시위의 해'였다면 2020년은 '정부 대응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별로 처한 상황은 특수하지만,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양상이 수용일지 탄압일지, 이에 대응한 정치권, 시민사회, 국민의 대응이 어떠할지에 따라 위기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장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

- 1월 5일 이란은 이란핵합의(JCPOA)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약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1월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
-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

◎ **미군의 공습 직후 국제 금융시장 및 원유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으나 빠르게 진정, 단기적인 군사적 갈등은 지속되겠으나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또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1월 9일 이후 안정세 유지
- 이라크를 비롯하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군사적 충돌 지속 예상

◎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 중 3.2%에 그쳐 수출 부문 영향도 제한적
-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학업계, 항공·해운업계 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중기적으로 유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시경제에 대한 가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강화되고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인 이란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이란 및 이라크 진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UAE 소재 아크부대나 레바논 소재 동명부대 등 우리군의 우발적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입 및 건설·인프라 등 경제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부문 교류를 통한 양국간 협력관계 유지 필요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ochung@kiep.go.kr, 044-414-1052)

김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가 UNCTAD TRAINS 웹사이트(<https://trains.unctad.org/>)를 통해 2019년 정식 등록 및 공개됨.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법령에 기초한 비관세조치들을 구체적인 분류 및 일원화된 수집 방법하에서 구축한 자료로, 국가간 정량적 비교 및 계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UNCTAD 자료는 비관세조치를 16가지 대분류와 약 200여 개의 세부분류로 구분하며 비관세조치 유형, 대상 국가, 대상 품목, 법령 정보, 시행 목적, 소관부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930건으로, 세번(tariff line) 기준 11,483개 품목(93.8%)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관세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출관련조치(15.9%)와 가격통제조치(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서도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RCEP 참여국과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비관세조치 유형별로는 TBT, 가격통제조치 그리고 품목군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높음.

- 타 RCEP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 수준은 TBT의 경우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광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고, 반면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축)에 대해서만 한국이 높음.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유형)를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국내적 규제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비관세조치는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동시에 무역 또는 공공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간 정량적 수치를 비교할 시에는 각국의 법·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실장 (sslee@kiep.go.kr, Tel: 044-414-1235)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Tel: 044-414-1048)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 ◎ 2020년 1월 9일 중국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표한 데 이어 폐렴환자가 사망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2003년의 사스(SARS)와 같이 확산될 가능성 대두
 - 세계보건기구(WHO)도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병원체로, SARS나 MERS처럼 중증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사스 발생 당시의 경제적 피해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으나, 치사율이 약 10%에 달하고 아직 백신·치료제가 없는 호흡기 감염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
- ◎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대부분의 환자가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발생했으나, 교통수단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어 싱가포르(환자 206명, 사망 32명)와 캐나다(환자 250명, 사망 38명)의 치사율은 15.2~15.5%에 달한 바 있음.
 - 당시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전체 환자의 91.9%인 7,754명이 발병하여 730명이 사망
- ◎ 한편 2003년 사스 확산의 경제적 피해로 홍콩은 사회적 비용 17억 달러 싱가포르는 2003년 GDP 성장률 1~1.5%p 감소로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사스의 영향이 2003년 2/4분기 GDP 성장률을 1%p(연간성장률 0.25%p)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됨.
-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폐렴 확산 가능성 대두되면서 주변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중국 우한 방문자들이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홍콩 정부는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대응 단계로 격상함.
- ◎ 이에 우리는 △중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정부간 협력 채널 점검 △과거 사스 발생 시의 정부대응과 국내 검역 강화 방안 등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과거 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민간연구진들과 합동하여 효과적으로 사스 사태를 이겨낸 경험이 있음.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정부와의 정보교환 채널을 마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음.

호주 산불 피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박나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신민이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 ◎ 2019년 9월 6일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빅토리아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등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5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 이번 산불로 최소 29명이 사망하였고, 남한 면적과 비슷한 1,000만 헥타르(10만 km²)가 불에 탔으며, 가축·야생 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1월 20일 기준).
- ◎ 호주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경제는 관광업,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됨.
 - 2018/19 회계연도 기준 호주 관광업은 전체 GDP에서 3.1%, 총 고용의 5.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이번 화재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18/19 회계연도 호주 농업 총부가가치(GVA)는 340억 9,300만 호주달러(27조 2,400억 원)로 전체 GVA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주요 농업 상품인 육류, 유제품, 양털, 와인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 ◎ 산불에 따른 호주 농축산업계의 피해로 인해 우리나라는 육류, 양모, 와인 등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2019년 우리나라의 대호주 쇠고기(냉동·냉장) 수입액은 총 8억 6,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19억 8,500만 달러의 약 44%로, 미국(10억 4,5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대호주 양모 수입액은 6,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 품목임.
- ◎ 향후 호주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바, 한국은 이를 통해 관련 분야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해당 자원 주요 수입국인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유연탄과 철광석은 2019년 우리나라의 대호주 1, 2위 수입품목인바, 우리나라는 호주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 호주 산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산불 이외에도 기후 관련 재해에 취약한 신남방 지역 국가와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 ◎ 타이완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國民黨)과 민진당(民進黨)에 의해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긴장과 협력 분위기가 교체되어 나타남.
- ◎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총 의석 113석 중 민진당이 절반이 넘는 61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유지함.
 - 2019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동년 6월 홍콩의 시위 사태 등이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 미국이 친미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한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타이완의 경제성장을 반등과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율이 민진당 승리의 요인으로 평가됨.
- ◎ 당분간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는 큰 후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강경한 군사적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양안간 인적교류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광제한 조치가 지속·확대될 경우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 수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과는 달리 양안간 무역은 그동안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어 온바, 이번 차이잉원의 당선도 양국간 교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이번 타이완 선거 결과로 인해 타이완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연이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줌.
 -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 양안관계 악화는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에는 일정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경우, 주변 정세불안에도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
 -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 교육,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
- ◎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격상 △상·하원 역할 강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
- ◎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
 -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 △의료 △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
 -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출산지원금 △보육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 ◎ 한국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사회·복지 이슈를 강조한 점과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한·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 영국 및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예정

-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51.9%를 득표한 이래 총리 2회 교체(카메론 → 메이 → 존슨), 조기총선 2회 실시, 브렉시트 시한 3회 연기(2019년 3월 → 4월 → 10월 → 2020년 1월) 등 혼란이 지속되었음.
- 존슨 총리가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하여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 돌입'을 확정
- 이행기(~2020. 12. 31) 동안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

◎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 일부 쟁점만을 수정

-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됨.
- 또한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도 마련

◎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됨.

-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음.
- 이행기 종료와 함께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될 전망이며, 관련 연구는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는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됨.

-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
-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 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윤여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Democratic Party)에서는 △조셉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마이크 블룸버그 △피트 부티지 등이 유력 후보로 경합 중
- ◎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면서 對중국 통상전략으로 관세부과 조치가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을 주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재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및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
- ◎ 샌더스와 워렌 후보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표명
 - 샌더스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 워렌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환율조작, 인권침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통상정책에 인권, 노동권, 투명성 관련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 ◎ 블룸버그 후보는 가장 자유주의적, 친기업적 경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부티지 후보는 중도적 성향을 표방
 - 블룸버그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특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
 - 부티지지는 미국 농민들이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주장
-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샌더스 혹은 워렌이 당선될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버금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개진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바이든이나 블룸버그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에 비해 훨씬 완화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
- ◎ 그 밖의 미국 내 경제정책과 관련,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친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이규엽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엄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heom@kiep.go.kr, Tel: 044-414-1149)

- ◎ 2020년 1월 1일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보호법(CCPA)」이 발효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 중
 -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법률이 없으며, 교육, 통신, 보험 등 분야별 연방 법률이 있을 뿐임.
- ◎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8월 5일 시행될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허용 ② 활용과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및 기능 강화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②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유사·중복 조항 등의 정비 등임.
- ◎ 한국의 개정 법률 내용과 미 연방 법률안을 비교하면 가명정보의 정의 및 처리 허용 여부 명확화,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일반적 적용 허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임.
 - [가명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법률안들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별 없이 비식별정보로 분류했으며,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입장이 다름.
 -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 우리나라의 개정 법률에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반면, 미국의 법률안에는 신용정보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반적 적용을 인정
- ◎ 데이터 3법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가용한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데이터 3법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
 -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044-414-1121)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hyosangkim@kiep.go.kr, 044-414-1065)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044-414-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khkim@kiep.go.kr, 044-414-1135)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044-414-1214)

- ◎ 2019년 12월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1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월 중순이 중국 내 확산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2월 10일까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누계 확진자 수는 4만 2,638명이며, 이 중 1,016명이 사망함.
- ◎ SARS 사례로 미루어볼 때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4분기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1/4분기 말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2020년 중국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확산이 2/4분기까지 지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이 1%p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유관산업 및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및 자본유출입 등 금융부문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화 및 엔화는 강세, 원화와 위안화는 동반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와 위안/달러의 동조화 현상 강화에 따른 환율변동 리스크가 증가함.
- ◎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후베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2018년 1.0%)하며, 후베이의 대한국 주요 수출 품목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관련성이 낮아 한국의 수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을 예상
- ◎ 하지만 SARS 시기(2003년)와 비교해 한국의 대중국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중국 내 조업 단축, 중국의 수출 및 소비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 존재
 - 총액 기준으로 한국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1.8%에서 2014년 5.3%로 증가함.
- ◎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① 정부 차원의 사업지속계획(BCP) 가이드 라인 수립 및 기업 차원의 BCP 구축 지원 ②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③ 중국의 적극적 정책 개입에 대한 대비 ④ 중국 지역별 확산 정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제안함.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정영식 신남방경제실 실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김정곤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팀장 (jgkim@kiep.go.kr, Tel: 044-414-1093)
 한형민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Tel: 044-414-1230)
 이정미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m@kiep.go.kr, Tel: 044-414-1252)
 문진영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정재완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신민이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박나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김제국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김미림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김소은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soeunkim@kiep.go.kr, Tel: 044-414-1169)
 현상백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팀장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이효진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박진희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김종혁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이현진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이정은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Tel: 044-414-1236)
 최장호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汉) 시에서 발병한 집단 폐렴에서 발견된 코로나19는 2020년 2월 17일 9시 기준 29개국 7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세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접국인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다수의 확진자 발생
 -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사스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전망
- ◎ 가능성은 낮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어 각국의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현지진출 기업과 수입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의 국가별 중간재 수출 규모 및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지진출 기업 및 국내 수입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의 전자부품 중간재 수출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멕시코를 중심으로 수출되며, 섬유류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계 산업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인도네시아로, 자동차운송 산업은 주로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러시아 등으로 중간재 수출이 이루어짐.
 - 한편 중국의 화학산업 중간재는 미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를 중심으로 수출되며, 1차 금속 산업 중간재의 경우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출됨.
 - 수출 기업 역시 현지 생산 축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 기업의 공급선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정부 차원의 사업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국내 및 현지진출 기업의 BCP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 기업·거점별 맞춤 BCP를 설정하고, 대체 가능한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검토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식수 공급 및 병원 설립 등 물적 인프라 외에,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gang@kiep.go.kr, Tel: 044-414-1196)

◎ 미국·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 이래 총 6번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주로 중국의 비시장지향적 무역 정책 및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에서는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미국·EU·일본은 공동성명에서 (i)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 유형을 확대 (ii) 공급과잉을 유발하거나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막는 유해보조금의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해 보조금 공여국에 일차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입증책임을 경감 (iii)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왜곡을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협정에 명시 (iv)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제재 강화 (v) 시장왜곡이 있는 보조금 공여국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이 일정 조건하에 국외가격을 혜택(보조금액) 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vi) ‘공공기관’ 개념에 국영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의를 협정상 명시할 것을 제안
- 위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WTO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2020년 6월로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앞두고, 이번 공동성명은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다자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WTO 협정 개정엔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포괄하는 WTO 복수국간 협정(PA: Plurilateral Agreement) 체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표명 및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에 기초하여 대외적 입장과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또한 이번 개정안과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지원 정책·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통상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이정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Tel: 044-414-1084)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 본고에서는 2019년 북중·북러 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여 2020년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다자, 소다자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발전시킴.
 -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재 위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북한 관광,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항공 협력’이 심화되었으며,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상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중국식 체제전환 전수, 일대일로 참여 제안’ 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음.
 -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북중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한 남북 관계에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 하였음.
- ◎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하반기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협력을 참고하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북한 국적이기 김포공항에 취항할 경우 남북 직항로를 활용한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가능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한 남북중, 남북러 철도 시범운송 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됨(2020. 1. 29~30, 프랑스 파리).

-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이 주요 내용임.
- [통합접근법] 다국적기업의 총 소득에서 시장 소재지국별 소득을 구분하여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연계기준이 마련되며, 이때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배분(Amount A) △기본기능 보상(Amount B) △추가기능 보상(Amount C)으로 구분됨.
- [글로벌 최저한세율] 다국적기업의 특정 이익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한편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자 제조기업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대한 여러 쟁점이 남아 있음.

- △과세전가 문제(다국적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ECD 디지털세가 합의되면 국내법 및 조약개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디지털세 협상]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조세체계 점검 및 디지털세 도입 준비]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개혁 내용 및 지역통합 전망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dhjoe@kiep.go.kr, 044-414-1123)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ijeong@kiep.go.kr, 044-414-1225)

- ◎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은 기존 단일통화인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을 폐지하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단일통화 ‘에코(Eco)’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
 - 개혁안의 핵심은 △세파프랑을 에코로 변경 △프랑스 재무부에 개설한 운영계좌 해지 및 예치 중인 외환 회수 △UEMOA의 주요기구에서 프랑스 인사의 참여 중단임.
 - 에코는 세파프랑과 같은 비율로 유로화에 연동되며, 프랑스 정부의 태환보증도 지속될 것으로 알려짐.
- ◎ UEMOA는 이 개혁안이 ECOWAS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에코존의 준비단계라고 주장하지만, 비UEMOA ECOWAS 회원국들은 개혁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발
 - 특히 ECOWAS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한 영어권 국가들은 고정환율제, 프랑스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을 들어 개혁안에 비판적
 - UEMOA의 발표 배경에는 구식민지와의 관계를 재편하려는 프랑스 정부와 선거를 앞둔 UEMOA 회원국 간 정치적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프랑스 프랑 및 유로화에 고정된 단일통화 체제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이 대립
 - 찬성 측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 재정건전성, 지역통합 등에 긍정적이라며 지지
 - 반대 측은 독자적인 통화정책·환율정책이 불가능하여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경기조정도 어려우며, 상기한 장점들도 뚜렷하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
- ◎ ECOWAS 내 프랑스어권-영어권 간 이해상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에코를 ECOWAS 전체에 확대 통용하기는 어려울 전망
 - UEMOA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태환보증이 지속되더라도 에코가 ECOWAS 전체로 확대 유통될 경우에는 태환보증이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인데, 프랑스의 개입이 약화될 경우 단일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 따라서 에코가 ECOWAS 차원에서 확대 통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거버넌스 강화 및 역내 이해관계 일치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기존과 같은 지원에 기반한 UEMOA 차원의 에코 체제가 유지될 전망

일본의 재난관리대책 및 시사점: BCP를 중심으로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Tel: 044-414-1045)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Tel: 044-414-1236)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wjson@kiep.go.kr, Tel: 044-414-1287)

- ◎ 일본은 잦은 재난·재해의 경험을 통해 일찍이 사업연속성계획(이하 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태국 홍수 등을 계기로 국내외 대규모 재해의 가능성을 상정한 BCP 관련 정책을 제고한 바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BCP 및 서플라이체인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크게 부각되었음.
- ◎ 일본정부는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
 - 내각부 산하 중앙방재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기업과 정부기관의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니가타현 지진(2004·2007년), 신종플루 확산(2009년), 동일본대지진·태국 홍수(2011년) 등 위기상황 발생의 교훈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 그 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각 기업 및 기관은 내각부·중소기업청 등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각의 BCP를 작성
- ◎ 일본정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BCP 책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강인화법」(2019년 7월 시행)에 기반하여 세제 혜택, 금융조치 및 보조금 등을 지원
 - 「중소기업강인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립한 BCP를 국가(경제산업대신)가 심사하여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적·비재정적 조치를 지원하는 BCP 인증제도를 창설
 -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세제 우대조치 △금융지원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BCP 수립 관련 자문 지원 △전문가 파견 등 비재정적 지원을 실시
- ◎ 도요타자동차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주요 부품수급에 차질을 경험한 이후 공급망 흐름 전반을 파악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2차 이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RESCUE’라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공급망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 닛산자동차는 동일본대지진 및 태국 홍수 발생 당시 모의훈련 경험과 기능 간(cross functional) 및 지역 간(cross regional)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니는 동일본대지진 시 일원화된 조달본부를 설치하여 공급망을 파악하고 이후에는 공급업체들과 소통하며 BCP를 강화함.
- ◎ 우리나라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기업 입장에서는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기적 재난발생훈련 시행을 통한 BCP 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업 연속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중요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문진영 다자협력 TF/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나승권 다자협력 TF/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r, Tel: 044-414-1130)
 오태현 다자협력 TF/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성희 다자협력 TF/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김은미 다자협력 TF/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emkim@kiep.go.kr, Tel: 044-414-1037)

- ◎ 2019년 신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후, 2020년 1월에는 투자수단으로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분야별 정책대응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를 발표함.
- ◎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한 수송으로 구분하여 이슈별 최근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에서 국가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나 배출량거래제 등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EU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역내 최초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등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임.
 - [지속가능한 수송] 최근 수송인프라 개선(기술 혁신, 지속가능연료의 활용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소비자 정책, 배출규제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 유럽 그린딜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EU 내에서도 그린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만큼 향후 정부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 EU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수송 분야 등과 관련하여 EU의 기준이 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송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상풍력의 활용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한·EU 간 교류협력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 국제사회에서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투자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 그린딜 등의 영향으로 유럽 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색채권 등 관련 금융 상품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기관투자자 및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코로나19와 러시아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2014년 이후 경제성장 둔화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OPEC 원유 감산 합의가 결정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순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2020년 대규모 정부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원유가격 하락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주수입원인 원유 판매수익이 저조할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성장 둔화의 원인 및 대응책] 2019년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는 주로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 [단기: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보전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
 - 러시아 통화당국은 지난 2월 7일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하여 2019년 이후 총 6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당국은 2020년 정부지출을 지난해 대비 7%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중·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에 의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고리(negative spiral)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투자촉진 방안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크게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및 수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SME) 지원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 [시사점]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하락 및 러시아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인으로 2020년 상반기에 민간 소비·투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장기 대응책과 관련한 2019~24년 정부의 예산지출 편성을 보면, 디지털 산업 발전 및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한·러 디지털 협력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조문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mhcho@kiep.go.kr, Tel: 044-414-1200)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044-414-1186)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hkoo@kiep.go.kr, Tel: 044-414-1271)
김현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이주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Tel: 044-414-1089)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Tel: 044-414-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kim@kiep.go.kr, Tel: 044-414-1135)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044-414-1205)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Tel: 044-414-1052)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3%), 미국(△0.36~△0.72%), 중국(△0.91~△2.03%)
- ◎ **[상품 수출] COVID-19 확산 시, 한국은 주요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확산 초기('09.4~8월)에 미국의 對세계 수입이 △13.1%, 對한국 수입이 △11.4% (신종플루 비유행 시기와 비교) 감소
 - 중간재(자본재 포함)가 수입 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수입 감소는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전까지 지속
- ◎ **[서비스 수출] 여행과 운송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이 외에도 유학생의 감소·입국 지연,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 제한이 서비스 수출에 악영향
- ◎ **[국내 경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음식업, 도소매업, 여행레저업, 운수창고업, 숙박업 등 피해 발생**
 -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일부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증가
- ◎ **[국제기구/기관 정책 권고]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기관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 해외 수요 위축과 중간재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안전망 확충(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 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상별 특화 지원 방안 수립)
 - COVID-19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출상품과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044-414-1283)
김중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044-414-1236)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soeunkim@kiep.go.kr, 044-414-1169)

-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경기급락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 지원, 실업자 및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완화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 ◎ **[재정정책]**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 소득세 감면을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 및 실업·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 **[금융정책]** 미국,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0) 금리 조치를 단행하고, 7,000억 달러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도 실시할 예정
- ◎ **[직접 소득지원]**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데, 그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이 다양함.
 -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 4,00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
 -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약 1조 1,000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 69만 개 중소기업에 최대 2만 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임.
 -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25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20억 달러)대비 17.7% 악화됨.
- ◎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악영향을 미쳤음.
 - UN 제재로 기계류·전자제품처럼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음.
 - 제재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 북한도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수입 지역 다변화, 식품 및 관광 산업 육성, 소비재 수입 확대, 대체 수출 품목 발굴, 비공식 무역 증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등으로 제재에 대응하였음.
- ◎ 2019년 북한경제는 산업 생산 둔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표’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 제재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식품분야 국산화 정책과 관광시설 건설 등에서 성과를 거둠.
- ◎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북중 무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분석 및 전망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Tel: 044-414-1048)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Tel: 044-414-1278)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Tel: 044-414-1283)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Tel: 044-414-1290)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충격이 발생초기의 예측은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기 생산 재개,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자동차 제조·교통 운송 장비 제조·기계 비 제조 부문과 중국 내 외자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
 - 중국 내 숙박, 여행사, 면세점, 항공, 철도 등 관광과 관련된 업종 역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 **2월 중순부터 중국의 주요 공업 지역인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사회활동 수준도 3월 초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상하이, 광저우(광둥성)의 경우 현재의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3월 말~4월 초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베이징의 경우 약 4~7주(4월 중순~5월 중순)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중국 내 온라인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비즈니스 모델,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핸드폰 등 주요 내구재 소비와 여행 및 외출 감소로 인한 서비스업 소비 둔화가 두드러짐.
-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의 수요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일본 등 중국의 주요 수출국에도 확산 되면서 금년 중국의 수출 전망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경영난 가중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
 - 중국의 내부 충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내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함께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내에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창출하고, 양국간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관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특징과 전망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044-414-1203)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 ◎ 미국의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이 2020년 3월 26일(미국 시간) 정식 발효됨.
- ◎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미 정부가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 및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타이베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에 따라 미국의 경계감이 증대되면서 추진됨.
 -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의 대(對)타이완 외교 공세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위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타이완과의 단교를 압박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타이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20년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관계 악화 및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 「타이베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타이완 간 양자무역협정(BTA)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타이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BTA를 포함하여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한 타이완 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 필요
- ◎ 본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전략 수립이 필요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ngsun@kiep.go.kr, Tel: 044-414-127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 ◎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현재 부속 법규 재정비를 위한 입법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독점법」도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반독점법」은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소수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이 현행 「반독점법」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현행 「반독점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구조하에서 제정된 법률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다양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 이에 따라 ‘수정초안’은 △ 인터넷(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을 반영하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 심사기한이 확대되었으며, 기업결합 재심사 및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신설함.
- ◎ 중국정부의 「반독점법」 개정은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수정초안 통과 이후 경쟁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이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도 인터넷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편중된 과열경쟁 해소 △ 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M&A)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국당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 ◎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 ◎ **[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 ◎ **[주요국별 정책 특징]**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

정영식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yosangkim@kiep.go.kr, Tel: 044-414-1065)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 044-414-1323)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lkim@kiep.go.kr, Tel: 044-414-1096)
이주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유애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Tel: 044-414-1239)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Tel: 044-414-1214)

-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선진국에 비해 고조**

 - 최근 신흥국의 자금유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90여 개의 신흥국이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신흥국 취약성을 보건분야 및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 지표로 평가**

 - 보건분야 취약성은 보건 의료 품질 및 접근성(Healthcare Access and Quality) 지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산출
 - 경제 펀더멘털 취약성은 재정건전성, 외환부문 건전성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산출
 - 분석 대상 신흥국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5개 주요 신흥국으로 선정
- ◎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는 남미(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아프리카 및 유럽(이집트, 남아공, 그리스, 헝가리), 동서남아시아(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 이들 국가 중 보건분야도 동시에 취약한 국가는 파키스탄, 남아공, 이집트,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며, 코로나19 사태의 심화 또는 장기화 시 타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국가에 해당
 - 반면 중국, 체코, 폴란드,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 다만 이들 국가 중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저유가 지속 시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될 전망
- ◎ **코로나19의 심화 및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경제·금융 분야 협력을 확대할 필요**

 - 고위험 신흥국에 대해 리스크 관리 강화,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한국으로의 전이위험에 대비하여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안정책을 확대
 - 보건 의료 분야 취약국에 대해서는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한국의 감염병 예방·치료 정책 및 경험을 공유
 - 경제 펀더멘털 취약국에 대해서는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신흥국에 대한 채무 상환 한시 유예, 긴급자금 지원,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해 노력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이전에 비해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ICT 관련 분야에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기업의 M&A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 ◎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미 M&A를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2월 13일자로 정식 발효됨.
 - 첨단기술 또는 중요 기반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 배경임.
 - 이전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지배적인 투자만이 심의 대상이었으나, 「FIRRMA」 시행으로 핵심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s)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함.
- ◎ 특히 미국은 「FIRRMA」 제정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개인(민감)정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기업의 투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군사, 첨단기술,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뿐만 아니라 △ 소프트웨어 △ 전자상거래 △ 금융서비스 △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 거래에 대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 규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제재 외에 사이버 보안,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중국기업의 미국 내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 조사 및 영업 허가 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 「FIRRMA」 발효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ICT 분야 중국기업의 대미 사업 진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미국의 대중 규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간 통상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소지가 큼.
 - 이에 중국 역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 등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미국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미·일 무역협정(USJTA) 발효와 한·일 대미수출 경쟁력 비교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kim@kiep.go.kr, 044-414-1135)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ochung@kiep.go.kr, 044-414-1052)

- ◎ 미·일 상품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시장 내 한·일 상품간에 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경쟁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상품협정에 의하면 일본은 농축산물(01~15류)을 중심으로 595개 품목(HS 9단위 기준)에 대해, 미국은 기계 및 장비(84~92류)를 중심으로 241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상호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함.
- ◎ 미국의 양허품목 241개를 대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나, 전 품목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민국 수입 모두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순으로 수입규모가 크나, 전 품목 수입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5.2%, 한국 3.1%로 높지 않음.
 - 일본 총수출(7,140억 달러)에서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87억 3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이며, 한국 총수출(5,737억 달러)에서 같은 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25억 4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미만임.
- ◎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미국 내 수입점유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의 대일본 수입관세율은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인하될 예정으로 향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241개 양허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점유율은 일본 9.5%, 한국 3.0%로 일본이 높고, 각 품목별 점유율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품목이 171개로 다수를 차지함.
 - 미국의 대일본 관세율은 상품협정 발효 1년 차(2020년)에 57개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127개 품목이 3.0%p 감축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평균 2.7%p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군집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민국 및 대일본 수입과 점유율이 높은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수는 8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계류(8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됨.
 -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83개 중 기계류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18개이며,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민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서도 다수의 품목이 기계류에 해당함.
- ◎ 현재 발효된 미·일 상품협정은 대상품목 수가 적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향후 미·일 간 추가협상에 따라 경쟁심화 품목 수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 중 고수입 양국경쟁에 해당하는 품목 659개가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8%로 높음.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 [세계경제] KIEP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전망치 대비 5.8%p 하향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는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의 모든 요소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산업생산도 위축시키면서 2020년 세계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미칠 전망

◎ [선진국]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성장세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미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둔화(△고용악화 △민간소비 감소 △산업생산·기업투자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주요국 및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봉쇄조치 시행으로 △급격한 소비위축 △역내외 수출둔화 △신규투자 감소 등 예상

-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고 전국을 국가긴급사태 대상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개인소비 위축 △투자감소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감소 등이 예상

◎ [신흥국] 중국·인도·베트남 등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러시아·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추이 등 대외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중국은 1/4분기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V자 회복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전국 봉쇄령이 하방요인이나, 긴급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유가하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예전 수준의 성장경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2019년부터 대외여건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펀더멘털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러시아는 원유 등 천연자원의 생산·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저유가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경기위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은 서비스업 비중 및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9년 정부부채 감소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개혁안들의 효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ODA 현황과 시사점

이주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044-414-1253)

송지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044-414-1074)

유애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044-414-1239)

- ◎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열악한 보건의로 재정·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진 개도국의 감염 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GNI 995달러 이하인 저소득국은 1인당 보건지출액이 41달러로 고소득국(3,024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내과의사가 0.3명(2015년) 수준으로 고소득국의 3.0명 대비 1/10 수준으로 보건의로 시스템이 매우 취약
 - 감염성 질병 및 모자보건·영양결핍에 따른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7.7%(2016년)로 가장 큰 원인임.
-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2~18년 연평균 총 ODA의 11.7%(162억 7,300만 달러)를 보건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 보건 ODA 중 양자 공여국의 지원 비중은 63%, 다자기구는 36%이며, 이 중에서도 3대 주요 감염성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AIDS와 기타 감염병에 전체 보건 ODA의 54%를 지원
- ◎ 보건 분야 주요 공여국은 개도국 내 감염병 확산을 해당 개도국의 후생 저해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 정책·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은 개도국의 보건 이슈를 ‘국제 보건안보’ 추구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접근방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국제 보건안보 구상을 마련하여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집중
 - 독일은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감염병 대응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WHO 국제보건규정(IHR)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응
 - 일본은 감염병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수평적 접근방식과 질병별로 특화된 수직적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지원
- ◎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를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비교우위 분야 및 ODA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ICT 분야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ODA도 실시

 - 감염병 관리 ODA 사업은 △다자기구와의 협력사업 △NGO의 지역사회 기반 감염병 관리사업 △지식공유 및 보건의로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분류
- ◎ COVID-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감염병 지원 강점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보건 전담 인적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긴급구호 차원의 한시성 대응 활동에서 나아가 전략과 중기 계획을 토대로 한 감염병 대응 ODA를 추진할 필요
 -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비교우위를 고려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여 사업간 연계를 제고
 -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 분야의 인적·제도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에 장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 전문성이 풍부한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효과성을 제고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 ◎ 2020년 1월, 중국 29개 지역(省)에서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19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저발전 지역인 중서부 권역이 2019년에도 높은 성장률(7~8.3%)을 유지한 가운데, 동북3성 등 14개 지역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함.
 - 중국 국내외 경기둔화세를 고려하여 대부분 지역은 전년대비 0.1~0.8%p 낮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1월 말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 ◎ 2020년 중국 대다수 지역은 중앙정부의 경제안정 기조에 맞춰, 인프라 투자 등 유효수요 확대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중점 지역발전전략 심화, '3대 난제(빈곤, 환경, 금융리스크)'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통 인프라 등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신에너지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확대, 소비 고도화 및 잠재소비 발굴, 무역 안정 및 고용 안정 등이 주로 제시됨.
 - 베이징은 수도기능 강화,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확충 및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추진, 텐진과 허베이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발전' 추진, 광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중시
 - 중서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빈곤을 강조
- ◎ 코로나19의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안정 필요성이 더욱 커진 중국 각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비 진작 및 소비생태계 구축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의 발행한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각 지역의 5G 상용화,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과 특고압 전력망, 신에너지차(車) 충전설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충격에도 중국이 경제·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형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유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신산업 및 혁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소비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소비시장 체질 강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 및 정책 시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단위 소비 지원금 및 서비스 소비 촉진정책을 추진할 것임.
- ◎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신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신산업, 비대면 온라인 경제 분야 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지방과 경제적 상보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윤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Tel: 044-414-1327)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요국은 외국인투자(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
 - [EU] 보건인프라 및 공공질서에 중요한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회원국간 협력을 요청
 - [프랑스] 2020년 말까지 바이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기업에 대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를 제한
 - [이탈리아] 수자원, 보건, 방송,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이 새롭게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필요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부권한(일명, 'Golden Power')을 강화
 - [스페인] 외국인투자에서 '외국인'의 범위 확대(EU 및 EFTA 이외 거주 외국인, EU 및 EFTA 거주민이라도 외국인의 통제를 받는 투자) 및 10% 이상 지분 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을 요구
 - [독일]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및 M&A 거부권한을 담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적 작업에 착수
 - [인도] 원자력에너지, 인공위성, 국방, 뉴스미디어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적(자동승인)으로 이루어져온 외국인직접투자가 인도의 육로 접경국가(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처도록 개정
 - [호주] 외국인투자의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자로 확대하는 「외국인 인수 합병법」 개정사항을 발표
 - [캐나다] 코로나19 기간 중 공공보건, 전략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과 관련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
- ◎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외국인투자 사전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 균형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해외 M&A투자 시 강화된 규제 요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신뢰를 구축해놓는 것이 필요함.
 - 국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 못지않게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 외국인투자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아르헨티나 외채 재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 ◎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Ángel Fernández, 2019. 12. 10~현재)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악화되고, 외채위기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연방정부 채무의 구조조정을 추진
 - 먼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 재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
- ◎ 2020년 채무 구조조정의 관건은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과의 재협상 성공 여부임.
 - 정부의 채무 협상안은 지난 3월 중에 제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연되었고,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정부는 더 이상 채무관리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4월 16일 협상안을 발표
 - 구스만(Martín Guzmán) 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채무 재조정 협상안의 규모는 총 650억 달러이고, 주요 내용은 원금 5.4%(36억 달러)와 이자 62%(379억 달러) 탕감, 그리고 2023년까지 3년간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유예임.
- ◎ 아르헨티나 외채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지지
 - 특히 거시경제적 관점, 지속가능한 채무관리를 위한 경제성장 여건 조성의 필요성, 디폴트 이후 대응책 한계 등 아르헨티나의 채무 구조조정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정부의 협상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각 채권별로 채권 소유자의 다수 동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민간 채권단이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피하기 어려울 것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IMF,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통령,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 국내 산업계 등의 지지 여론, 그리고 채권단의 협상안 제시 등을 감안할 때 협상은 타결될 것이나 시기는 6월 중이 현실적임.
- ◎ 아르헨티나의 외채 재협상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남미 인접국이나 신흥국으로 전염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신흥국의 외환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김유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yrkim@kiep.go.kr, 044-414-1326)

강반디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 (bdkang@kiep.go.kr, 044-414-1076)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044-414-1145)

김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 디지털 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봄.

- 디지털 화폐를 ① 발행 주체 ② 기술(원장방식) ③ 안정성 ④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

- [안정성]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는 기존 화폐 및 자산과의 연결성에 의한 가격의 안정성이 주요 기준인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정보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안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간주함.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는 높은 공급량·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도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각국과 규제당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규제기관은 리브라(Libra)가 높은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히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리브라(Libra) 측은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며, 출시일자 및 세부 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 JP모건은 멤버십이 제한된 기관간 거래를 목적으로 한 JPM Coin을 준비하고 있으며, 송금 테스트를 마친 상태

◎ [CBDC] 중국은 2020년 CBDC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유럽은 CBDC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공조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를 시작한 이래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통제 방식의 디지털 화폐로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사용할 전망이다. 중국 CBDC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립 △금융리스크 관리기제 마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 우려 불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유럽] 현금 사용량이 줄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 전체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스웨덴은 e-krona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스테이블 코인 및 중앙은행 CBDC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 금융불안 및 정책 효과의 변화 우려

- 한편으로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 가능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그 외에 이번 양회에서는 기존 양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홍콩보안법」 △민법전 등 주요 법률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
 -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 △민생 △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하였음.
 -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탈피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빈곤층 및 농민공의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정부가 밝힌 신규 고용, 실업률, 빈곤탈피 목표 및 재정적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재정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할 전망
- ◎ 중국정부는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코로나19 방역 ② 3대 난제 해결 ③ 내수 확대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⑤ 혁신주도형 발전 ⑥ 시장화 개혁 ⑦ 지역 균형 발전 ⑧ 대외 개방 확대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9대 중점업무를 제시함.
 -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방역, 3대 난제 해결(특히 빈곤탈피), 고용 및 민생 안정, 내수 확대 등이 강조되었음.
 -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공급가치사슬 안정 보장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표준 제정 등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이 제시됨.
- ◎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발 리스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중국 내 2차 유행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간 갈등 심화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중국과 코로나19 방역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중 통상 갈등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원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 ◎ 2020년 5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對 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였음.
 - 이번 조치로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對화웨이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
 - 화웨이에 대한 기존의 25% 최소기준 규정(de minimis rule)에 더해 EAR §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에 Entity List 관련 (vi)을 신규로 추가하여 규제 강화
- ◎ 이번 조치의 전략적 목적은 화웨이가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 중 이번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TSMC라는 점에서, 본 규제 확대 조치는 화웨이와 TSMC 간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정부는 이와 동시에 애리조나 주에 TSMC의 5nm급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였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전략적으로 TSMC를 중국의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읽힘.
- ◎ 화웨이는 당장 첨단 시스템반도체 수급 문제에 직면
 - 생산의 경우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주자 SMIC의 기술수준이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 뒤쳐질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설계한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여 화웨이에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boycott) 받게 됨.
 - 따라서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 기업에 의뢰 하는 것임.
- ◎ 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번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중요함.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044-414-1022)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 ◎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안정된 중국은 3월 말 이후 내수확대 및 고용안정으로 정책 중심을 변경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도 경제안정을 위해 준비해온 정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투자 확대 중심의 안정적 성장정책을 준비하였고, 관련 경기부양 정책이 금년 1월 개최되었던 지방 양회(两会)에서 발표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중국 내 경제적 위상(GDP, 무역, FDI) 및 한-중 경제협력(대중 수출·투자)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환발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중서부 및 동북의 주요 지역을 선정, 특징적 내용과 함께 핵심 정책과제를 분석함.
- ◎ **국내외적으로 다중고에 직면한 중국은 전국 대상의 지역개발보다는 효율성과 파급력이 큰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제도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
 - 베이징(北京)은 송안신구(雄安新区) 건설을 통해 비(非)수도기능을 분산시키고 허베이·텐진과 협력하여 IT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발전’ 사업을 추진
 - 광둥(广东)은 홍콩·마카오와의 하드 인프라 연결뿐만 아니라 시스템·제도 혁신, 통관·물류, 주거·복지 협력 강화를 통해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조성을 가속화
 - 상하이(上海)는 자유무역시험구 확대·강화, 커황반(중공판 나스닥) 육성 및 장쑤·저장·안후이와의 협력을 통한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개방·혁신 기능을 강화
 - 최근 위 광역경제권의 핵심도시인 송안신구, 선전시, 쑤저우시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사업,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등 다양한 제도개혁 실험이 추진되고 있음.
 - 향후 각 광역경제권의 내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통합의 제약요인 해결이 관건
- ◎ **최근 20년 만에 서부대개발 추진방침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내수회복 및 일대일로 전략 확대를 위한 지역전략으로 서부대개발이 재부상할 전망**
 - 충칭(重庆)은 자동차산업의 스마트화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기기·부품, 산업인터넷 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추진
 - 경제규모 대비 2020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큰 윈난(云南)은 중·아세안 협력 강화, RCEP 발효 등 전략적 고려에 기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계획
-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후베이(湖北)는 국가적 종합정책과 IT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지속되고 후베이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의 수입대체 역할이 확대되어 향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 **역사적으로 한·중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산둥(山东) 및 동북 지역과는 정부간 협력수요 증대를 계기로 한 미래 신산업, 디지털 서비스, 규제완화 테스트 등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에 기반을 둔 ‘한중 산업협력단지(엔타이)’,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외에도 ‘한·중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등을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
 - 해당 지역에서 한·중 민간 경제주체의 협력 동력이 약화된 만큼 양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제도개방 합의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gang@kiep.go.kr, Tel: 044-414-1196)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 기능 전반이 상실될 위험
- MPIA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MPIA 참여 회원국 간의 분쟁을 일반적인 상소기구 절차 대신 DSU 제25조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하기로 하는 약정임.
- MPIA 가입은 자유로움. 기본적인 틀은 통상적인 WTO 상소 절차규정에 기초하였으나, 상소심의 ‘90일 심리기한’과 관련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현재 EU,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 중(주요국 중 미국, 일본은 비참여)
- 2020년 6월 3일 MPIA에 따른 세 건의 상소중재합의 통보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회람되어, 머지않아 첫 MPIA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

◎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MPIA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MPIA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MPIA의 성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

- EU는 MPIA 비참여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MPIA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
- 미국은 MPIA 운영을 위한 WTO의 예산 할당과 WTO 사무국의 지원을 이유로 MPIA에 공식 반대

◎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WTO 분쟁을 염두에 두고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

- (i)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안
- (ii) DSU 제25조 중재를 통해 상소심뿐 아니라 패널심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iii) 타방 분쟁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소권 포기 합의(No-Appeal Agreement)를 사전에 체결하는 방안 (iv) MPIA에 참여하는 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접근법이 가능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 이란은 코로나19 초기 발병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큼.

- 6월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2,439명(9,065명 사망)으로, 지역 내 주요 확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13만 6,315명 확진, 1,052명 사망), 카타르(8만 2,077명 확진, 80명 사망) 등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남.
-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된 4월 이후 재확산세를 보임.
- 봉쇄 완화로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에 -5.4%의 역성장을 보인 이후, 2019/20년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산업인 석유부문 생산이 제재 복원 이후 50% 가까이 감소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가 제한된 가운데,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도 사실상 마비됨.
-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영기업 기업공개(IPO) 추진, 저소득층에 분배된 공정주(Justice Shares) 거래 허용 등의 영향으로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0% 이상 상승함.

◎ 이란 정부는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국제 공조를 적극 모색함.

-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1,000조 리알(약 240억 달러)을 할당하고 저금리 대출 제공, 대출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 등을 추진함.
- IMF에 50억 달러 지원 요청, 국가개발기금 자금 10억 유로 인출, 국영기업 상장 등의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함.
-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이란과의 교역 결제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3월에 처음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거래가 이루어짐.

◎ 한국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대응을 통한 이란과의 협력 재개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할 것임.

- 현재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미국이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8(General License 8)'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가능한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4월 이란에 의료·방역 장비를 지원한 가운데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출범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역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미국 및 이란과의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 ◎ 2020년 6월 14일 9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만 내 확진자 수는 443명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파악됨.
 - 대만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잦은 교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비율이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한국(23.3명), 중국(5.9명) 보다도 낮은 수준
 - 대만은 선제적인 방역 성공으로 인해 도시봉쇄, 이동제한 및 대규모 공장가동 중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에 비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양호
- ◎ 대만의 초기 방역 성공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대응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03년 SARS의 경험을 통해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게 관련 대응조치를 시행한 결과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
 -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방역, 구제(紓困), 진흥(振興)’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내·외부 확산 양상에 맞추어 단계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행
 -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만정부는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
- ◎ 대만은 초기 방역조치의 성과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태 종료 이후 경제·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및 대책 논의를 조기에 시작함.
 - 초기 방역에서 거둔 성공은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 추진 여력의 확보로 연결
 - 이에 대만은 코로나19 중·후기에는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기업, 사회, 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집중해 외부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비·산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우위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발전 대책을 모색
- ◎ 한국은 초기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만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방역물자 관리, ICT 기술 활용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재정비 조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음.
 - 대만은 규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질병 확산에 강력히 대처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과 출입국 시스템의 조기 연계를 통해 방역 효율성을 제고
-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산업 정책에 힘입어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 및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대만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 겸용(民軍兼用, dual-use)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 ◎ 시진핑 정부는 ‘혁신강국(创新强国)’ 건설을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과학 기술 인재 육성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아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서며,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이와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 ◎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추정 모델(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 출원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미국을 추월
 - 구체적 첨단기술 분야 중 5G, 슈퍼컴퓨터,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수위를 다투고 있음.
 -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수준임.
-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정책이 중국정부 주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출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을 제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티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음.
- ◎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의 중·일(中日) 관계가 보여주듯,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 [확산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4월 이후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6월 24일 기준 총 약 6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세계 3위)
 -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 3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코로나19 유급 휴가 기간’ 공포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역 감염 사태를 막지 못했음.
 -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1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확산세가 최근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8월 중순경 1일 확진자 수가 큰 폭(약 1,000명대)으로 감소될 전망
- ◎ [경제충격과 정부 대응] 2020년 1/4분기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어 소비와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보임.
 - 4월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와 내구재 소비 급감 등 민간 소비가 크게 줄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급증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순수출이 대폭 감소함.
 - [민간소비] 여가, 문화, 스포츠, 외식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로 4월 민간 서비스 부문 지출이 전년동월대비 -37.9%, 소매거래증가율은 -23.4%를 기록함.
 - [생산] 서비스업을 제외한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를 기록했으며, 기계 및 경공업 부문 생산은 20% 넘는 생산 감소를 경험함.
 - [노동시장] 4월 실업률이 5.6%로 급증해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와 휴직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
 - [순수출] 국제유가 급락으로 1/4분기 순수출은 전년대비 30.5% 감소한 355억 달러에 그침.
 - [정부대응] GDP의 약 2.9%(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통해 수요 진작에 주안점을 둔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안정 및 가계소득 보전을 목표로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 [경제회복 전망] 코로나19 ‘2차 대유행(second wave)’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분기 저점을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1년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성장률은 유가 전망에 따라 -3.4%에서 -5.6%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로 연중 저유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0년 성장률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